

-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*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.

* [예시] ①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 조달, 영업규제,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(소위 '대부업 프리미어리그')
 ② 사업자 중금리대출('20.11월 출시)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

-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,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검·경·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, 세무검증·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·처리하겠습니다.

-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, 최고금리 초과지급 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·강화*하겠습니다.

* [제도 개요]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·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
 ①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

[20년 실적] '20.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, 소송대리 22건 지원
 →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, 8건 승소하여 1.56억원의 권리구제(초과지급이자 반환) 지원

2.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◆ 청년·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,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'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'를 도입하고, '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'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.

- 청년·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 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,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*하겠습니다.

* [예시] 3억원 대출(이자 年2.5%)시, (30년만기) 118.5만원 → (40년만기) 99.4만원, 16.1%↓

- 청년에게 2%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('19.5월~)을 충분히 공급하고,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.

	현 행	개 선
공급한도	총 4.1조원 20년말 3.6조원 지원(한도 거의 소진)	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
1인당 한도	보증금 7천만원, 월50만원 이하	상향 검토
보증료	0.05%	0.02%로 인하

-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, 신탁업 제도 개편*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* 신탁재산 범위 확대,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, 신탁유형 확대 등

-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.

- 코로나19로 인한 휴·폐업자의 경우,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(최대 2년)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

* (현행) 업력 1년 이상 휴·폐업 자영업자

(개선) '20.2월~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중 휴·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

- 연체기간이 31~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(이자율조정)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구 분	현 행	개 선
이자율 인하수준	약정이자율의 50%	채무과중도,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
취약계층 특례대상	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등	+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

-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('21.上 국회제출 예정)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, 금융 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.

3.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

◆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(3.25일)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□ “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*”(“21.1월~)을 법 시행 전·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.

* 금융위, 금감원, 소비자단체, 금융권 협회, 핀테크협회로 구성

○ 분야별 전담반*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·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.

* [주요 분야] ① 업자 등록 ② 내부통제 ③ 광고심의 ④ 영업행위 지침

□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,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(금감원 홈페이지內)을 마련하고

○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.

* (예) 설명회 개최, 금융권 임직원 교육,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, 금융교육 등

□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,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○ 또한, 농·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·추진하겠습니다.

[별첨1]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

[별첨2] 금융발전심의회 「금융소비자·서민금융 분과」 주요논의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#1.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낮아집니다.

-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였으나,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하여도 **매월 납부금이 119만원**이어서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
-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되면, A씨 부부는 **월 납부금이 99만원**으로 약 2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.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**금리변동 위험없이 상환**하면서,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빨리 갚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#2.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나 과도한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.

-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,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,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한 1,200만 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하였습니다. 이후 A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A씨는 금감원에 신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**소송변호사를 무료로**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하여 **연 6% 초과 이자지급액을 반환**받게 되었습니다
(‘21년 대부업법 개정시, 대부업법 개정 전 연 24% 초과 반환)
※ 무료지원 신청 : 금융감독원(☎1332),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전국 지소)

#3. 민간 주도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됩니다.

-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성실히 상환한 결과 신용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았으나, **소득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**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-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 **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새롭게 출시**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**1천만 원을 기존 제2금융권 보다 5%p 낮은 금리로 대출**을 받을 수 있었고, **연간 50만원의 이자 비용을 경감**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